

북한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25년 북한 사회 평가 및 2026년 전망

김성경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kksocio@sogang.ac.kr

I. 서론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2026년 2월 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를 2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향후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조만간 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지만 북한 정권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¹⁾ 이를 두고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한 민생 경제 성과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부터 격동의 국제 정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시각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말부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와 북미 대화 등의 가능성을 둘러싼 메시지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예측도 있다. 이제 곧 발표될 제9차 당대회의 내용이 향후 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5년간의 북한 사회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 대한 분석 대다수가 북한경제 혹은 북한의 대외 정치 및 남북관계라는 맥락에 천착하고 있었다면, 본고는 지난 5년 사이의 북한 사회의 굵직한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북한 사회 연구의 근원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현지조사가

1) 북한의 제8차 당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 바 있다. 과거에는 당대회가 비정기적으로 열려 왔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5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경례화 되었다(『로동신문』, 2021. 1. 10. 보도)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간과 당대회 일정을 일치시켜,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정기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불가능하고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경 통제가 강화된 까닭에 그나마 유통되던 북한 내부 소식이 사실상 끊어져 버렸다. 지금까지 북한 사회의 면면을 국경을 오갔던 사람들의 전언이나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통해서 확인해 왔지만, 지난 5년 동안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입국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일상 수준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졌고, 북중 무역이나 북한을 오갔던 NGO 등의 소식통이 사라지면서 북한 내부 사정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²⁾ 결국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징후적으로³⁾ 읽어 내고 정치와 경제 등의 지표를 교차적으로 검증하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본 연구자는 2020년 이후에 탈북한 탈북민의 심층 면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면접에 참여한 탈북민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이를 두고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 결국 공식 매체의 발표 이면의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 등을 제한된 인터뷰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며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 북한 사회라는 영역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 등과 견주어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 과잉 체제로 알려진 탓에서인지, 기존 북한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의 범주를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와 고난의 행군 이후의 역동적 변화가 만들어진 경제 밖의 나머지의 영역으로 설정해 왔다. 이는 사회과학 분야가 ‘사회’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주로 개인과 집단의 합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회적 실재(social facts)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정치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더 상위 개념으로 접근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제한된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주력해 온 연구자 및 정책 기관이 피할 수 없는 인식론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분단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황과 ‘사실’을 규명해 내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어느 국가들처럼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면 북한 내부의 상황 전반을 영역을 구분하여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 사회를 고정된 영역 혹은 구조의 합으로

2) 김정은 정권 시기부터 탈북민의 수는 하락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국경이 닫힌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 2023년에는 196명, 2024년에는 236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급감한 상황이다. 2020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이주한 이들은 극소수이고, 중국이나 제3국에 상당 기간 거주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3) 여기서 징후적 읽기는 알튀세르의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그의 저서 *Reading Capital*(1968)에서 텍스트의 표현적인 문구 혹은 내용을 따라가는 것과 텍스트 이면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을 징후적 읽기(symptomatic reading)라고 정의한다. 즉, 텍스트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과 텍스트가 쓰인 인식론의 공백(특정 인식론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Louis Althusser and Balibar Etienne, *Reading Capital*, Verso, 1965).

설명하지 않고, 수많은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자 끊임없는 활동과 관계를 통해서 ‘되어가는(becoming)’ 것으로 접근하려 한다.⁴⁾

행위, 사건, 관계 등이 만들어 가는 북한 사회는 그 자체로서 역동성을 떨 수밖에 없다. 체제의 정책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지시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동되면서도 아래로부터의 흐름과 실천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면면을 가늠해 보는 일이다. 예컨대 북한 체제가 ‘선전’하는 지방 공업 공장과 살림집 단지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는지, ‘정의의 성전’이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체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경험으로 감각되는지 등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사람들의 삶과 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가치를 강조해 온 북한에서 ‘인민’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상 통제 및 법적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인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무엇인가? 2026년이 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미래적 전망과 계획을 설계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북한 사람들은 팬데믹과 국제 제재라는 이중 파고 속에서 ‘안녕’한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이 짧은 글이 이러한 질문들에 명징한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의 주요 상황과 사건들을 훑어보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영향력과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하노이 노딜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의 의미

2019년 하노이 노딜은 북한 체제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공식 매체는 북미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출발했던 사실을 거의 시차 없이 보도했으며, 하노이 현지의 상황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렸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무오류성이 강조되어 온 것을 감안했을 때 하노이 노딜은 단순히 외교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과 상징적 힘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북한 체제는 공들였던 북미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관련 보도 분량을 줄이고 점차 ‘자력갱생’과

4) Andrew Abbott, *Processual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정면돌파전’ 등을 강조하며 절치부심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회담으로 해결하려던 국제 제재는 지속되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에는 큰 홍수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지도자가 직접 홍수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즈음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 체계가 불안정한 북한에는 커다란 위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state of emergency)’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와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⁵⁾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국경을 봉쇄하였고, 2020년 1월 30일에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였다. 국경봉쇄 조치는 약 3년 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2023년 8월 27일에 해외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하는 것으로 국경 개방이 이뤄졌다. 국경봉쇄와 국가비상방역체계는 하노이 노딜로 상처를 입은 지도자의 권위와 체제 내부 장악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국제 제재 상황에서 소위 말해 시장 세력이라고 알려진 중산층의 불만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시장 세력을 촘촘하게 통제 및 규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예컨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이 제정되었다는 점도 그러하고 이후에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1) 등 시장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년 세대나 여성, 더 나아가 시장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를 제도화하는 법제들이 제정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⁶⁾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 체제는 주민들의 남한 대중문화 접근을 완전히 끊어 내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북한 체제가 법 제정을 비롯해서 높은 수준의 단속에 나선 것은 이미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남한 문화의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1조에서는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을 차단”하고, “시청, 류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조항에서는 ‘괴뢰사상문화’와 ‘적대국 사상문화’를 구분하여 차별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뢰사상문화는 바로 남한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만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문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끼치는 영향을 막아 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19년 12월 말 제7기 5차 당전원회의에서 천명한 자력갱생,

5) Kim Sung Kyung, “Change and Continuity: North Korean Society at a Crossroads,” *Global Asia*, 16(3), 2021, 9.

6)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9월에 「청년교양보장법」이 제정되었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외교전, 군사적 담보, 당의 사상통제 등을 내세운 ‘새로운 길’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이러한 방향성은 고스란히 제8차 당대회에서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된다.⁷⁾ 제8차 당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민위전,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한다.⁸⁾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내부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타파하는 것을 당의 운명, 사회주의의 성패와 직결된 사활적 과업”으로 강조했다.⁹⁾ 무엇보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 문화의 확산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해야 할 것으로 규정짓는다. 당대회 이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이나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바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위한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문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로 규정된 남한 문화와 언어 등이 체제 위협에 결정적인 요인인지 여부이다. 일각에서는 남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체제 위협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남한 대중문화의 성격상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한류와 민주주의 사회 운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해외 연구에서는 한류 팬덤이 특정한 정치적 힘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사회나 민주주의 경험이 일정 정도 성숙된 국가라는 조건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다.¹⁰⁾ 다른 말로 하면 한국 대중문화에 빠져든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경험’뿐만 아니라 대안 정치 세력, 민주주의 경험,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정치적 이슈나 사건, 디지털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구조나 주민들의 의식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남한 대중문화는 이들에게 ‘문화적 도피처(cultural escapism)’로서의 효과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상 사회 변혁의 힘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반 조건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해왔던 질문은 남한 대중문화가 ‘얼마나’ 체제를 위협하는지 여부인데, 사실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문화를 통해 정치화된 북한 주민들이 체제 붕괴에 나설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존재한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읽어낼

7) 김갑식, 「북한 제8차 당대회 분석」, 『안보현안분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Vol. 175, 2021. 1. 31.

8)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2021. 1. 13.

9)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사업보고」, 2021. 1. 11.

10) Raisa Bruner, “How K-Pop Fans Actually Work as a Force for Political Activism in 2020,” *Time*, 2020, 07. 25; Park Jiwoo, “K-Pop Fandom and Political Activism in Thailand’s 2020 Student Mo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8, 2024.

때 한국 사회를 오래토록 떠돌고 있는 북한 체제 붕괴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질문은 북한 체제의 사상·문화 통제가 도대체 왜 2020년이라는 국면에서 시행되었는지 묻는 것이다. 즉, 북한 체제의 전면화된 통제와 규율이 만들어 내는 효과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의 ‘체제 위협’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운 남한 문화 경험을, 그것도 북한 내부의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에 나선 것은 분명 그것의 이면에 의도와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거주민, 중산층, ‘체제유지 직군’,¹¹⁾ 청년 세대 등에 대한 통제가 주요 목표일 수 있다. 국제 제재 환경에서 시장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시장 중심 세력이나 권력을 가진 평양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북미회담의 실패는 이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미 대화 실패로 상처 입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상위층에 대한 문화 통제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장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북한 체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규율함으로써 국가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 둘째, 몇 년 후인 2023년 말에 발표된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의 정치 작업으로서 남한 문화 통제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2018~19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대중문화 공연이 비록 짧게 편집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4.15 경기장에서 직접 연설을 한 것도 녹화방송의 형식으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한 북한 체제의 전향적인 시도였는데, 북미 대화가 좌초되고 난 이후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남한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에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아래 내부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 체제의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외부의 적, 특히 남한에 대한 적개심 구축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찍이 슈미트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라는 내집단은 적이라는 타자를 구성하여 그에 맞서기 위해 결속할 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실존적 상태가 된다.¹²⁾ 하나의 이념 아래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적으로 명명된 타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명분에 모두가 동의하고 각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적을

11) 여기서 체제유지 직군은 보위부, 보안서, 법관, 교원 등을 아우르는 직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실태 보고서』(2024)에서 이러한 분류 체계를 활용한 바 있다.

12)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 판』, 김효진 번역, 법문사, 1992.

물리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 결국 시장화, 국제 제재, 남북과 북미 대화 등의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라는 집단적 상태에 상당한 틈새가 만들어졌던 북한 내부를 다시금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남한을 ‘적’으로 재위치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 문화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로 명명하며 체제 위협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Ⅲ.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안팎: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가?

제8차 당대회 이후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기하면서, “당은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 나간다”고 강조하였다.¹³⁾ 북한 체제가 인민대중을 위해, 인민대중에 의한 ‘새로운 길’을 노선으로 설정한 것은 사상을 튼튼히 함으로써 내부 단결을 추동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 및 관료들이 ‘인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 대회에서 강조했던 인민 경제 개선이나 보건 및 교육 여건 활성화 등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맥락 내에서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인민대중주의의 핵심인 인민대중을 ‘위한’다는(이민위천) 정치 방향 아래 높은 수준의 사상 및 일상 통제 그리고 처벌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문화를 시정 및 유폐하거나 남한 식의 언어 표현 사용이 적발되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법령까지 제정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높은 강도로 통제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인민 대다수가 외부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인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보임에 분명하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의 불만을 상쇄할 정도의 가시적인 경제적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은 이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에 비해 “현실적이고 보수

13) 『조선로동당 규약』(2021. 1. 9. 개정).

적으로 계획”되었다는 평가다.¹⁴⁾ 경제발전 계획이 시작된 2021년과 2022년은 국경봉쇄와 국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2년 8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경제발전 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였다. 결과적으로 2023~24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2025년에도 안정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경제 개선의 이면에는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 북중 무역 회복,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량, 2024년부터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인한 건설 및 지방 공업 상황의 개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가시적인 인민 생활의 개선으로 확산되었는지 여부이다.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⁵⁾ 그 이유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획 목표 수치가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내세우는 경제 성과나 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⁶⁾ 혹은 경직된 경제 구조, 부패한 사회적 네트워크, 거기에 지역 격차 등의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 성과가 특정 계층, 계급, 지역에 집중되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건설한 지방 공업 공장이 주민들의 삶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지점이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20×10 정책으로 2025년에 12월에는 평양시 강동군, 평안남도 신양군, 자강도 량림군, 평안북도 대관군, 함경북도 부령군 등 5개 군의 지방 공업 공장이 준공하였고, 2026년에는 대규모의 신의주 온실농장도 완성하였다. 단순히 공장뿐만 아니라 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시설 등도 함께 준공되고 있는데, 예컨대 2025년 11월 19일 강동군병원, 12월 13일에는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¹⁷⁾ 또한 주민 생활 시설인 종합봉사소의 완공 소식도 들려온다. 남포시 룡강군, 평양시 강동군, 평양북도 구성시, 함경남도 정평군 등에서 주민봉사소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완공되었다. 도시와 지방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지방발전 계획을 통해 단순히 공업 공장의 수를 늘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20개 군에 병원을 짓고 종합봉사소를 건설하는 등 인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8차 당대회 이후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이종규, 「기묘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2026.

15) 최은주, 「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2025-22, 2025; 최은주, 「2025년 하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구상 및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2025-30, 2025.

16) 이종규, 「기묘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2026. p.14.

17) 『YTN』, 「김정은 지방 병원 준공식 참석...'보건 혁명' 강조」, 2025. 12. 14.

경제적 측면에서 또 다른 성과는 평양 화성지구 건설 완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 그리고 평양종합병원 완공·개원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다. 2021년부터 진행된 평양화성지구 5만세대는 매년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낙후한 지역의 재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 준공한 평양종합병원 역시 ‘보건혁명’의 일환으로 추진 및 완공되었고 2만명 규모의 숙박 시설이 들어선 원산갈마해안지구도 사업을 시작했다.¹⁸⁾ 특히 원산갈마해안지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 정세와 열악한 교통 인프라 등의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주민들의 문화·여가 생활 시설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엄청난 규모로 건설된 살림집 단지, 병원, 관광 시설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지 여부인데, 적어도 병원이나 관광 시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운영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예컨대 평양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제약 산업 발전, 약품 공급 체계 보완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병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¹⁹⁾ 원산갈마지구의 경우에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일 최대 170명의 관광객 유입이 추정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국내 관광객들이 원산갈마지구를 활용하기에는 국내 소비 여건의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체제가 추진한 경제 관련 사업은 규모나 수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작동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위해서 대규모의 노력 동원이 실시되고, 각 단위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나 자금 등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공 이후에 각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공장의 준공식 이후에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력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직된 체제의 특성상 지방 간부들은 준공 기일에 맞춰 공장을 가동하는 것처럼 만들어 면피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평가도 있다.²¹⁾ 사실 속도전을 내세우면서 매년 지방 20곳에 공장을 짓고, 그것을 10년 동안 지속한다는 계획 그 자체가 이러한 부작용을 이미 담지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토록 무리한 계획을 김정은 정권이 감행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공장과 생활 시설 건설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18) 2021년 제8차 당대회와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는 관광을 외화벌이의 수단을 넘어서 주민 복지 향상의 실천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에 항공구락부, 승마구락부, 물놀이장, 청년야외극장, 휴양소 등이 건설되고 있고, 3대 필수 건설 중 하나인 ‘복합형 문화중심’은 과학기술 보급기지와 영화관, 체육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통합된 형태로 설계되었다(이해정, 2025, pp.15~16).

19) 『로동신문』(2025. 6. 10).

20) 이해정, 「2020년 이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조 변화 추적 및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추진 동향 평가와 과제」, 『수는 북한경제』, 2025년 가을호, 2025, pp.20~24.

21) 『자유아시아방송』, 「북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때만 ‘반짝’ 가동」, 2025. 2. 25.

요동치는 민심을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방 인민들의 삶이 임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폐쇄, 이동성 제약, 국경 무역 봉쇄 등이 만들어 낸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수 있다.²²⁾

공식과 비공식 사이의 간극이 파생하는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미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공식적 수지와 비공식적 경제활동 사이의 차이는 물론이고, 공식경제 밖에서 삶을 운영해야 하는 평범한 주민들의 경제적 삶은 공식 부분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일쑤다. 예를 들어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평양 살림집 건설과 평양종합병원, 거기에 지방 발전 계획의 일부로 진행되는 공장 건설 사업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노력 동원과 물적 자원의 상납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0년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로 더 많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력 동원에 참가해야 했음을 토로하거나, 가장 하급 단위에서부터 층층이 얽혀 있는 상납 구조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²³⁾ 국가 단위의 사업이 결국 국가의 공식 영역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상납과 노력 동원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결국 인민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의 북한 사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2024년 중반 정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양국은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였고, 10월부터 특수부대를 포함한 사단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졌다.²⁴⁾ 정확한 파병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 파병된 1만 1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2천여 명이 전선 지역에 추가로 파병되었다는 보도도 있다.²⁵⁾ 급변하는

22) 통일부가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는 점점 더 커졌다. 식생활, 거주 형태 및 상태, 에너지 사용, 정보통신 인프라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양과 지역 사이의 차이는 상당했다(『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2024).

23) 본 연구자는 2025년 7월~10월까지 2020년 이후의 탈북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보고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고, 글의 논지를 교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24) 서동주·김경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24(4), 2024.

25) 『KBS』, 『북한군 1천여 명 추가 파병... "격전지에 재투입"』, 2025. 2. 28.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요한 지렛대로 삼기로 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단순히 무기나 포탄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군인을 전장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파병의 무유형의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의 이전,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경제적 협력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러시아가 북한 파병 군인 1인당 약 2,000달러의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외화가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군 파병에 따른 민심의 동요도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위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식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군인들을 위로하고 작전에 참가한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평양에 파병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관과 묘역 착공식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주요 지휘관들을 위로하고 파병 군대를 직접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파병 전사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에서 “우리를 믿고 맡긴 귀한 아들들, 아직은 너무도 푸르게 젊은 생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전사자의 남겨진 아이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키워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파병된 군인들은 제국주의와의 성전(聖戰)에서 싸워 이긴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사자들의 남겨진 아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북한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감정정치 일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나, 2023년 12월 제5차 어머니대회에 참가해서도 역시 어머니들의 노고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선대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사례가 적었던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거나 인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것을 보는 인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일종의 “슬픔의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인데,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슬픔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동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는 기쁨은 인간의 행위와 의지를 증강시키는 힘인 반면에 슬픔은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감소시키는 정동적 힘인데, 슬픔의 정동은 종종

권력자의 통치의 기반이 된다고 역설한다. 예컨대 스피노자는 슬픔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능력을 잃고 의존적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권력자와 사제들은 죄의식, 공포, 부채감 등과 같은 슬픔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정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을 유지한다고 이론화한 바 있다.²⁶⁾ 슬픔을 끊임없이 정동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선전 방식이 만들어 내는 효과가 무엇인지 좀 더 숙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군인들과 관련된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나 전사자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현장에서 지도자로서의 회한과 슬픔을 숨기지 않는 모습 등은 파병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북한 내부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을 감행한 것도 그러하지만, 사상자의 수가 상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체제가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파병이라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동원도 더욱 빈번해졌고, 또한 남한 대중문화를 비롯한 생활 규율과 통제가 극도로 강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파병 군대 가족들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정치 방향 아래 실행되는 일련의 정책이 인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한 채 ‘언설’과 ‘구호’로만 남겨져 있다면 파병으로 인한 북한군의 희생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배가시킬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체제는 더더욱 인민대중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9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각자의 불만을 지도자와 체제에 직접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인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내놓은 여러 정책과 이데올로기 등은 그만큼 북한 내부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체제의 대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즉,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는 북한 체제의 위치가 탈냉전 이래로 가장 전략적일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북한 주민들의 불안한 삶과 불만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 체제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에티카/정치론』, 추영현, 동서문화사, 2016, 제3부 감정의 기원과 그 분석에 관하여와 제4부 인간의 예측 또는 감정의 힘에 관하여 등을 참조하라.

V. 결론: 2026년 북한 사회 전망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지난 5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 국제 사회의 제재 체계에 돌파구를 만들려 했던 노력은 하노이 노딜로 실패했고, 곧바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팬데믹과 자연 재해 등으로 사람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방역에 덧붙여 사상·문화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인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 여러 국가사업은 인민들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곳곳에는 살림집, 공장, 병원 등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인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2026년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국가가 주도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질 좋은 상품과 물류가 지방 곳곳까지 유통되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지 여부일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생활 편의 시설과 병원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속도전을 내세우면서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경제발전을 이뤄 내는 것이 지난 5년의 북한 상황이라면, 결국 지금부터의 관건은 ‘속도’보다는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2026년에도 끊임없이 ‘속도’를 강조하며 건설을 하고, 농장을 짓고, 공장과 병원을 세우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더 많은 성과를 강조했다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인민들을 활용해 온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온통 노력 동원과 조직생활, 생활총화와 교육활동 등으로 가득한데, 이는 반복되는 노동과 집단행동 등을 통해서 체제의 규율을 몸에 각인시키는 과정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반복되는 단체 활동은 주민들의 일상을 고단하게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들의 의식과 감정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낸다. 게다가 넉넉하지 않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항상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노동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북한 시장화의 사회적 의미는 시장에서 적극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하려 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보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성을 지닌 주체의 등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시장화가 한층 고도화되었던 2010년대 후반의 경우, 이러한 적극적 주체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 청년과 여성 집단에서 상당수 확인되었고 이들의 행위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20년 이후의 상황은 사상·문화 통제, 국가 동원사업 확대, 경제의 재집권화 등을

통해 국가가 이러한 주체들을 다시금 ‘수동적’ 존재로 전화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26년은 북한 체제가 주도하는 이러한 방향에 한동안 시장에 기대 살아 온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규율의 고삐를 한층 틀어쥐 북한 체제가 이미 다층화된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기준점이다. 체제가 내세우는 경제발전이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주민들의 삶과 유리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체제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통제 틈을 뚫고 주민들이 또 다른 ‘생존 전략’을 펼쳐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 러시아로 파병 간 군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과 같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변화된 의식이나 실천 등이 북한 주민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체제의 경제 재집권화 시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시장 세력들이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국가와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에는 언제나 인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대책’이 뒤따랐다는 것은 여전히 현재적 함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보여준 생명력을 감안해 봤을 때 이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살아갈 방도를 찾아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 사회의 미래를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어느 사회이건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법이고, 언제든 특정한 사회적 힘이나 사건이 충격이 되어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이 체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체제의 의도는 북한 사회에 그대로 관철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일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아마도 향후 북한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시장화 20여 년 동안 축적한 자신들의 행위성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 체제의 정책 방향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지, 통제와 규율의 틈새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사회적 주체로서의 욕망과 욕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 사회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사건들의 연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결국 그곳의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변화가 북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갑식, 「북한 제8차 당대회 분석」, 『안보현안분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Vol.175. 2021. 1. 31.
-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에티카/정치론』, 추영현, 동서문화사, 2016.
-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24(4), 2024.
- 이종규, 「기रो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2026.
- 이해정, 「2020년 이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조 변화 추적 및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추진 동향 평가와 과제」, 『수은 북한경제』, 2025년 가을호, 2025.
- 최은주, 「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2025-22, 2025.
- 최은주, 「2025년 하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구상 및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2025-30, 2025.
-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 판』, 김효전 번역, 법문사, 1992.
- 『YTN』, 「김정은 지방 병원 준공식 참석,...‘보건 혁명’ 강조」, 2025. 12. 14.
-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사업보고」, 2021. 1. 11.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2021. 1. 13.
- 『로동신문』(2025년 6월 10일).
- 『로동신문』(2021년 1월 10일).
- 『자유아시아방송』, 「북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때만 ‘반짝’ 가동」, 2025. 2. 25.
- 『조선로동당 규약』(2021. 1. 9. 개정).
- Abbott Andrew, *Processual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 Louis, Althusser and Balibar Etienne, *Reading Capital*, Verso, 1965.
- Raisa Bruner, “How K-Pop Fans Actually Work as a Force for Political Activism in 2020,” *Time*, 2020, 07. 25.

『KBS』, 「북한군 1천여 명 추가 파병... “격전지에 재투입”」, 2025. 2. 28.

Kim Sung Kyung, “Change and Continuity: North Korean Society at a Crossroads”,
Global Asia, 16(3).

Park Jiwoo, “K-Pop Fandom and Political Activism in Thailand’s 2020 Student Mo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8, 2024.